

李대통령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 국민 없을 것”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 주제

“형평에 맞게 부마항쟁도...정부 노력”
여객기 참사 부실 수습엔 “납득 안돼”
“정부부처 지방 추가 이전 없다” 단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5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 강화, 계엄요건 강화 이런 것도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며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 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며 야당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개헌과 관련한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를

물으며 “일리 있는 제안이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하면 좋겠다. 법제처가 국무총리실과 같이 얘기하든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에 대해 “조사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며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본인들이 하는 행위나 처분의 결과가 수용하는 국민 입장에서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진척 상황을 점검한 뒤 “유족들이나 피해 가족들이 억울하다거나 (정부가) 무관심해서 섭섭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잘 챙기라”고 강조했다.

또 사고 발생 1년2개월이 지난 최근 일부 참사 희생자의 유해가 발견되며 부실 수습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시신 수습조차도 제대로 안해서 쓰레기봉투 비슷한 데에 같이 모아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경위 파악을 거듭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부처의 지방 이전과 관련, “해수부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추가 정부부처 분산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의 안건이었던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방안 ▲균형성장을 위한 재정 대응방안 논의를 마친 직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행정도시를 만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걸 또 다른 데로 옮기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개척 등 위낙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유일한 예외”라며 “농식품부를 광주로 보내달라고 그리고, 문체부를 강원도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며 잘라 말했다. /김진수기자

강기정 ‘순천대 의대’ 공약에 전남 서부권 ‘발칵’

전남지역 최대 현안인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소재지를 놓고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6일 발표한 ‘순천대 의대 설립’ 공약에 전남 서부권이 강력 반발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은 17일 페이스북에 ‘강기정 시장, 제 정신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강 시장의 이런 막가파식 주장은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논쟁을 촉발하고 전남도민을 분열시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강 시장은 전남 오전 순천시의회를 찾아 ‘전남 동부권 100만 도시를 위한 10가지 약속’ 중 하나로 순천대에 의대와 부속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목포시민, 전남도민은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목포의대, 전남권의대 설립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고 목포대와 순천

대는 대학 통합이라는 의지를 보임으로 의대 설립의 물꼬를 뒀다”며 “전남권 구성원 모두 상생의 지혜를 모아 진행하고 있는 의대 설립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제가 알던 그 강기정 시장이 맞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제 정신인가” 직격...철회·사과 촉구
목포대 총동문회도 “최악의 정치적 갈라치기”
姜시장 “빅4 수준 병원 목포에 유치하자”는 것

김 의원은 강 시장에게 “자신의 선거 이득을 위해 목포의대, 전남권의대, 설립의 시계를 다시 과거로 돌리겠다는 유치한 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목포를 비롯한 전남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목포대학교 총동문회도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기정 시장은 전남권의

대 설립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총동문회는 “강 시장이 내놓은 전남권 의대 설립 관련 발언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전남도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최악의 정치적 갈라치기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동문회는 “36년 사투의 역사를 일개 정치인의 표 계산기에 집어넣지 마라”며 “강 시장은 도민의 합의를 문개버린 독단적 결정과 오만한 참견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문제는 그동안 소재지를 정하지 못하는 문제로 많은 시간이 지나왔다. 이제 결정해야 할 것은 결정해야 한다”며 “정원 100명 규모의 의대와 부속병원을 순천에 설치하고 목포에 ‘빅4’ 수준의 병원을 통합특별시 재원으로 유치하자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시원기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북구청장 출마 선언

‘북구 대전환 7대 프로젝트’ 제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17일 6·3 지방선거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의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를 변화시킨 실력과 북구 2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합시대 으뜸도시 북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
신 의장은 “지금은 도시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순간”이라며 “AI 시대와 광주·전남 대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북구가 시대를 이끄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때 광주의 관문이자 교육·문화 중심지였던 북구가 구도심 침체와 복지비 급증으로 미래 투자 여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도시의 구조와 성장 전략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북구 7대 대전환 프로젝트로 ▲광주역 도심축 전환 ▲1구 1AI 비서 보급을 통한 AI 생활도시 구축 ▲북구 명칭 변경 및 자치



시 전환 추진 ▲페밀리랜드의 국내 최대 사과리월드 리모델링 및 도심형 생태학습 습지 벨트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청년의 첫 경력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인턴십을 제공하는 청년기회도시 프로젝트, AI 기반 도시안전 시스템 구축, 생활체육과 평생학습 인프라를 결합한 예방 중심 복지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변은진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